

경기침체와 개인 삶 방향성 분석

- **'사회이익'과 '개인이익' 중 중시하는 것**
 - _ 국민들, '개인이익 중시' 경향 뚜렷
 - _ 모든 계층에서 '개인이익 중시' 의견 우세
 - _ 2030세대가 선도하고 다른 세대가 동참
 - _ 국민들, '개인이익 중시' 흐름 우려하고 있어
- **정부 복지·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 _ 국민들, 공동체 구성원 지원에 동의
 - _ 성/연령별 : 2030세대, 여성이 지원에 적극적
 - _ 40대 지원정책 필요성 높고, 5060세대 낮아
 - _ 개인이익 중시층, 지원정책 필요성 낮아
 - _ '삶 번창중' 필요성 높고, '고통스러움' 낮아
- **사회 봉사·지원 활동에 대한 태도**
 - _ 국민들, 국내 봉사·지원활동에 더 우호적
 - _ 성/연령별 : 2030세대, 여성이 필요성 점수 높아
 - _ 50대,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가장 높아
 - _ 개인이익 중시층,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낮아
 - _ '삶 번창중' 계층, 상대적으로 필요성 높아
- **경기침체에 따른 태도 변화**
 - _ 국민들, 경기침체 상기사 정책 필요성 소폭 낮아져
 - _ 경기침체 감안 사회단체 기부 의향, 유무 팽팽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5월 5일(금) ~ 5월 7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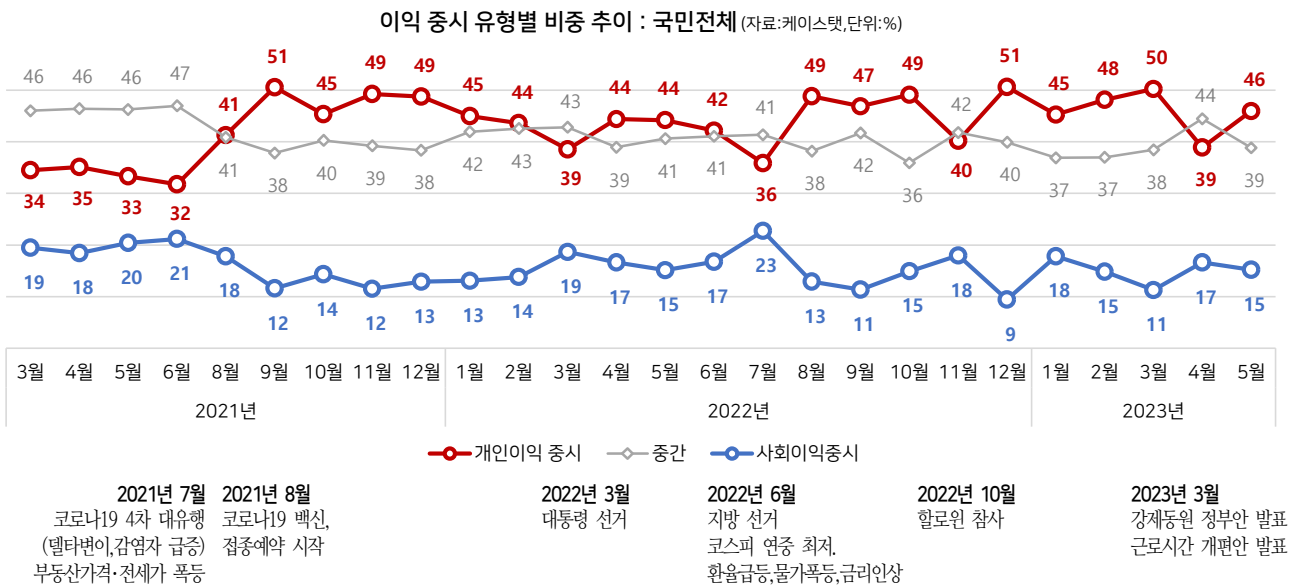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사회이익'과 '개인이익' 중 중시하는 것

□ 국민들, '개인이익 중시' 경향 뚜렷

- 우리 국민들은 '사회 전체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함
 - "선생님은 선생님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응답 결과임
- 시기별로 살펴보면, 2021년 6월까지 '개인이익 중시'가 30%대이고 '사회이익 중시'가 20% 수준이었으나, 8월부터 '개인이익 중시' 의견이 급격하게 상승함
- 이후 현재까지 '개인이익 중시' 여론은 최소 36%에서 최대 51%까지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임
 - 케이스탯에서 관련 조사를 처음 실시한 것은 2021년 3월이고, 2021년 7월에는 '2030세대 특집'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전국민 조사결과가 없음
- 2023년 5월 현재 국민여론은 '개인이익 중시' 46% vs '사회이익 중시' 15%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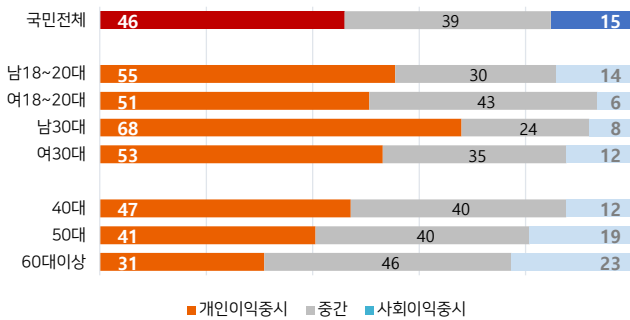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사회이익'보다 '개인이익'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1년 8월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임
- ☑ 2021년 8월 조사시점 전후의 사건을 살펴보면, 코로나19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었음
 - : 코로나19는 7월에 4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감염자가 급증했으며,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됨
 - :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 7월 월간통계부터 조사표본 수를 확대해 발표했는데, 한 달 만에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2억 원가량 뛰고, 외곽지역인 도봉구 매매가는 49%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 : 두 사건이 국민의 '개인이익 중시' 강화 여론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 '개인이익 중시' 여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됨
 - : 2022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022년 6월에는 지방선거와 이른바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시대가 본격화되었으며, 2022년 10월에는 할로윈 참사가, 2023년 3월에는 '강제동원 정부안' 발표 등이 있었음
 - : 본 조사는 주로 월초에 실시함에 따라 이전 달 이슈가 많이 반영됨

□ 모든 계층에서 '개인이익 중시' 의견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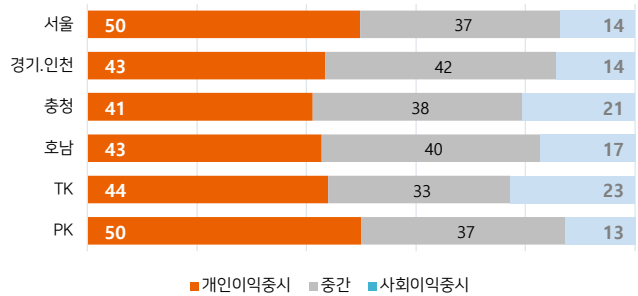
- '개인이익 중시' 여론은 국민 전체는 물론 모든 계층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2023년 5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 계층에서 '개인이익 중시' 의견이 우세함
- '개인이익 중시'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녀 2030세대 △서울, PK △화이트칼라 △삶, 번창중 계층 △보수층 △국가, 잘못된 방향 의견층 등임
 - 남자 30대가 68%로 가장 높음
- '사회이익 중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이상 △TK △진보층 등임
 - 가장 높은 계층은 진보층으로 25%로 조사됨

이익 중시 유형별 비중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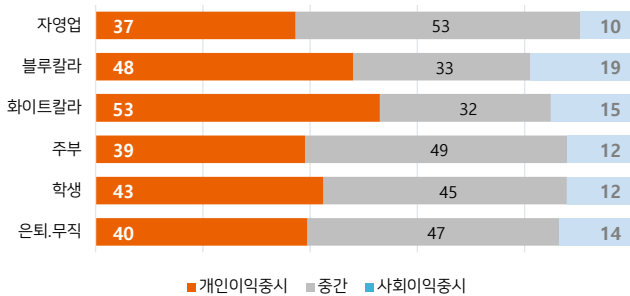
이익 중시 유형별 비중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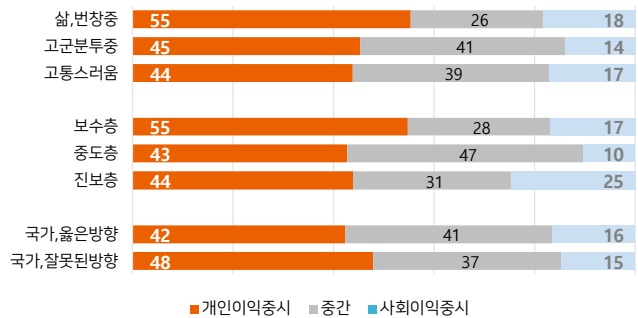


이익중시 유형별 비중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이익중시 유형별 비중:삶평가별,이념별,국가방향 평가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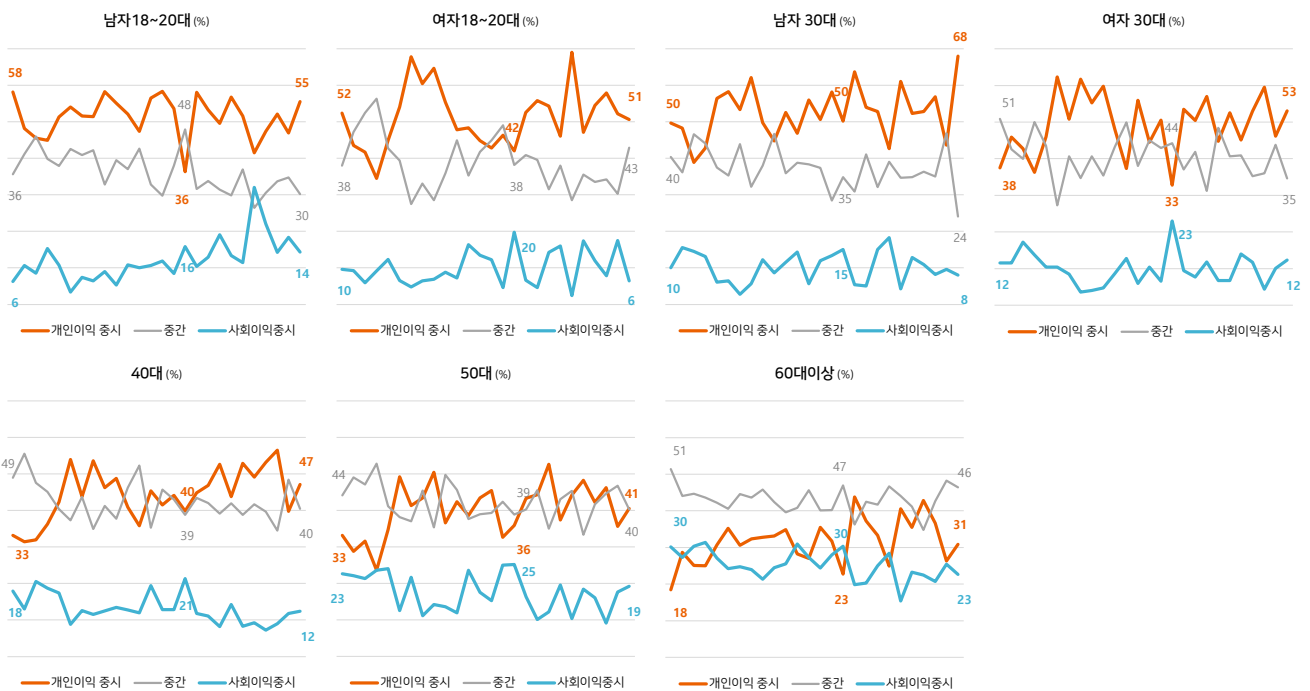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개인이익'을 중시하는 양상은 특정 계층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확인됨
 - : 즉, 우리 국민들은 '개인이익'과 '사회이익'이 충돌할 경우, '개인이익'을 선택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함
 - : 앞서 보듯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이익 중시' 비중이 하락하지만, 그래도 '개인이익 중시' 의견이 '사회 이익 중시' 의견보다 우세함
 - : 또한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 뚜렷한데, 그만큼 우리 국민의 '개인이익 중시' 여론이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보임

□ 2030세대가 선도하고 다른 세대가 동참

- 성/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2030세대가 ‘개인이익 중시’ 흐름을 선도하고, 다른 세대가 이에 동참하는 양상임
 - 아래 그림에서 첫 번째 숫자는 조사를 시작한 2021년 3월 수치이고, 두 번째 숫자는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시대가 본격화된 2022년 7월 수치이며, 세 번째 수치는 2023년 5월 현재 수치임
- 조사 초반에는 국민 전체적으로 ‘개인이익 중시’ 의견이 우세하지 않았으나, 이때도 2030세대는 ‘개인이익 중시’ 의견이 우세했음
- 4050세대는 2022년 7월부터 ‘개인이익 중시’ 의견이 우세해졌고, 60대 이상은 2022년 8월부터 우세한 흐름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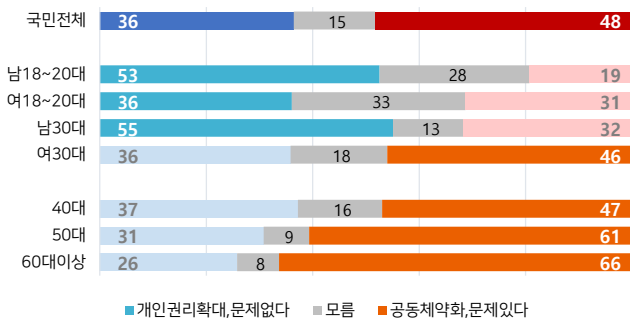
Kstat Point

- ☑ 건강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개인 이익’을 중시하는 국민이 더 많은 한국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 ‘개인이익 중시층’이 많아졌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라는 것임
 - : 이러한 주장에 따른 전망은 우리사회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추락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구심점이 약해지는 등 국가적 위기가 강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주를 이룸
- ☑ 이와 달리 ‘개인이익 중시층’의 대두는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구축된, 부정할 수 없는 ‘실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 이점에 주목하면 공동체 이익을 중심으로 개인이익을 배치하던 기존의 사고와 관점을 바꿔, 개인이익을 중심으로 공동체 이익을 재구성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 즉, 국민 개개인의 이익 중시 흐름을 수용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 이익 증대 방안과 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임

□ 국민들, '개인이익 중시' 흐름 우려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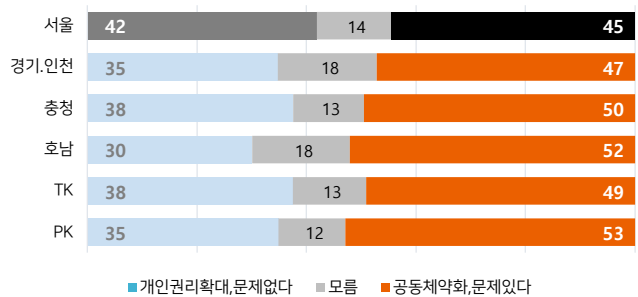
- 국민들은 지금의 '개인이익 중시' 흐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약화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48%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36%로 조사됨
 - "최근 우리사회는 공동체 이익 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우세한 의견이 다른데, 먼저 '공동체 약화, 문제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4060세대 △서울 제외 전 지역 △자영업, 화이트칼라, 주부, 은퇴.무직자 △개인이익 중시층, 사회이익 중시층 △삶 평가별 모든 계층 △전 이념층 등임
- 이에 비해 '개인권리 확대,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녀 20대, 남자 30대 △학생 등임
- 두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서울 △블루칼라 △개인이익 중시층 등임

개인이익 우선 흐름 평가 : 국민전체,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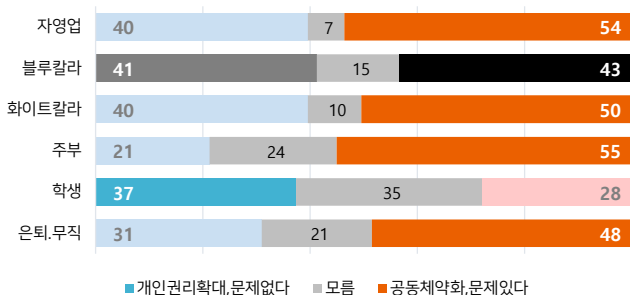
개인이익 우선 흐름 평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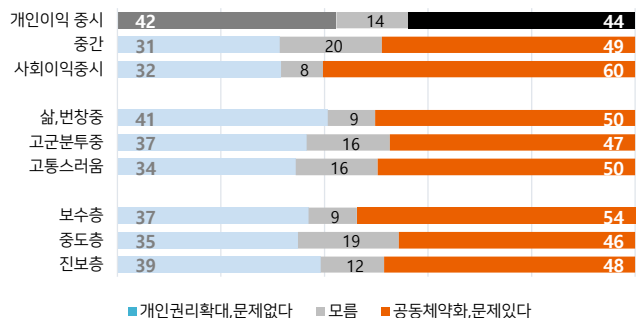


개인이익 우선 흐름 평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개인이익 우선 흐름 : 이익중시별,삶평가별,이념별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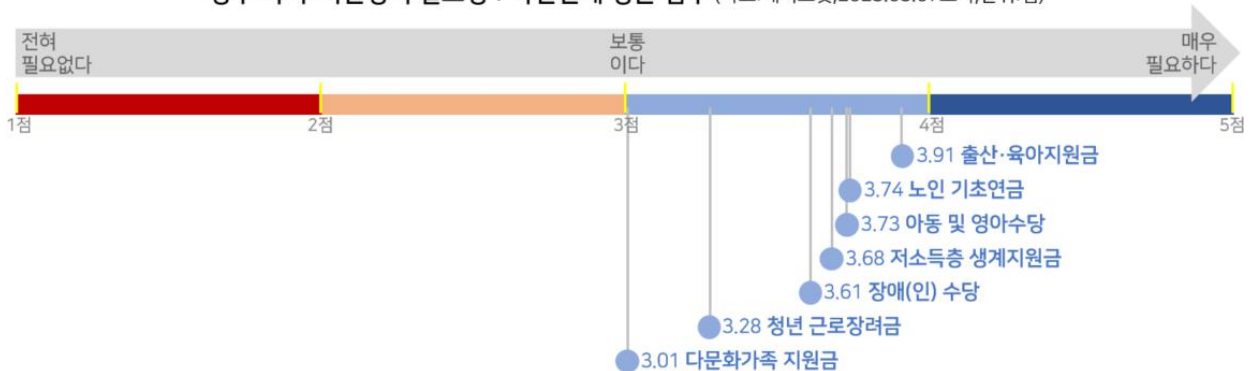
- ☑ 국민 다수는 '개인이익 중시' 흐름에 대해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약화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 남녀 2030세대와 남자 30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대부분의 계층에서는 '문제있다'는 의견이 우세함 (서울, 블루칼라 계층은 의견이 팽팽함)
- ☑ 앞서 모든 계층에서 '개인이익 중시' 의견이 우세한 것을 볼 때, 상당수 국민들은 '개인이익 중시' 흐름에 동참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다만, 남자 2030세대는 50% 이상이 '문제없다'고 응답하며 당당한 태도를 유지함

▶ 정부 복지·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 국민들, 공동체 구성원 지원에 동의

- 정부의 복지·지원정책 필요성을 다양하게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사회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각각의 복지·지원 정책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전혀 필요없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필요하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임
- 필요성이 가장 높은 정책은 ‘출산·육아 지원금’(3.91점)이고, 다음은 ‘노인 기초연금’(3.74점), ‘아동 및 영아 수당’(3.73점), ‘저소득층 생계 지원금’(3.68점), ‘장애(인) 수당’(3.61점) 순으로 응답함
- 필요성이 가장 낮은 정책은 ‘다문화가족 지원금’(3.01점)이고, 다음은 ‘청년 근로장려금’(3.28점)이었음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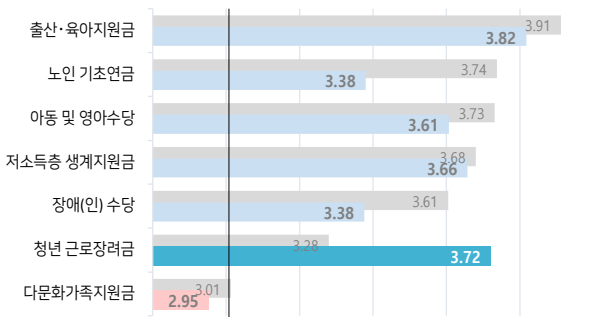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전체적으로 ‘개인이익 중시’ 흐름이 뚜렷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
 - : ‘개인이익 중시’는 철저히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회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즉, 지금의 ‘개인이익 중시’ 흐름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다른 것으로 보임
- ☑ ‘출산·육아 지원금’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우려감 때문으로 보임
 - : 2022년 우리나라 인구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가 12만 3천여 명 감소함
 - : 이 추세가 유지되면 2031년 이전에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지원금’ 필요성이 3.01점으로 겨우 3점을 넘긴 점이 주목됨
 - : 인구감소·소멸에 대한 극복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는 것이 외국인 유입(이민 등)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금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보임
- ☑ 한편, ‘청년 근로장려금’ 필요성이 두 번째로 낮아, 청년층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낮은 것으로 분석됨
 - :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46%에 불과하고 구직단념자는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청년층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어 있음 (자료 : 통계청, 2023년 4월 기준)
 - : 그럼에도 국민들은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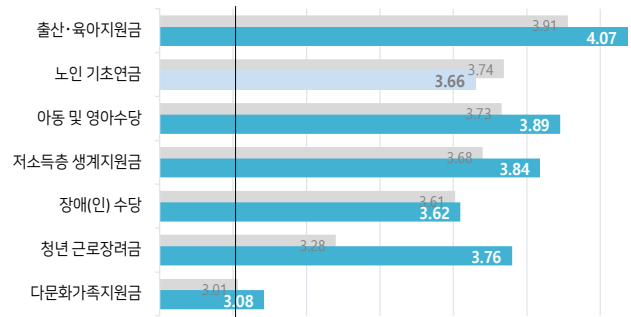
□ 성/연령별 : 2030세대, 여성이 지원에 적극적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공동체 구성원 지원에 적극적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필요성 점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 색으로 표시함
 - 검은 세로선은 '보통'(3점) 기준선이며, '보통'(3점)보다 낮은 수치는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가장 필요성 점수가 높은 성/연령대는 여자 20대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그 다음은 여자 30대, 남자 30대, 남자 20대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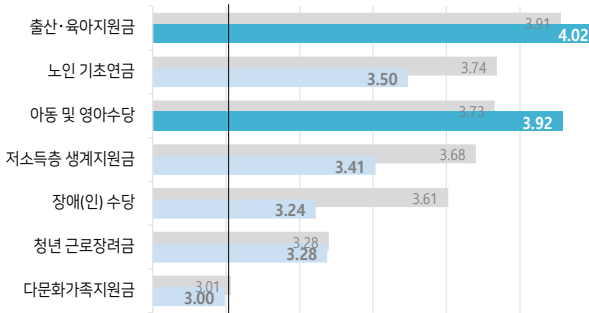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남 18~20대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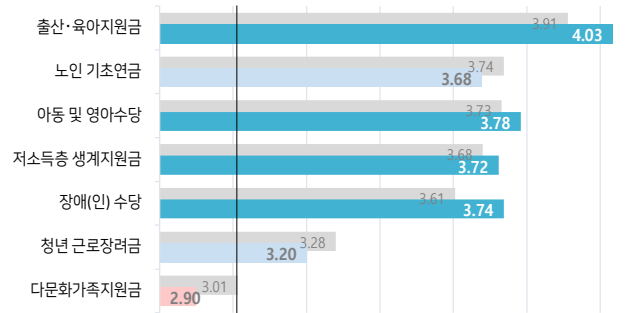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여 18~20대 (단위:점)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남 30대 (단위:점)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여 30대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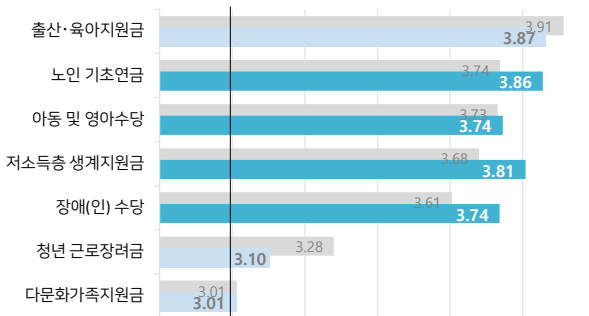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의 정책 필요성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노인 기초연금'으로, 국민 전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함
 - : 여자 20대의 경우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노인 기초연금'만은 국민 전체보다 낮음
 - : 2030세대의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 20대와 30대를 가르는 기준점은 '청년 근로장려금'인 것으로 나타남
 - : 20대는 남녀 모두 국민 전체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점수를 기록했지만 30대는 국민 전체보다 낮음
 - : 현 시점에서는 '청년 근로장려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연령대는 20대에 국한되어 있음
- ☑ 한편, 남자 2030세대는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낮은 필요성을 기록함
 - : 남자 20대는 '청년 근로장려금' 외 모든 정책 필요성 점수가 낮고, 남자 30대는 '출산·육아지원금'과 '아동 및 영아수당'을 제외한 필요성 점수가 낮음
 - : 이들은 모든 성/연령대 중 가장 필요성 점수가 낮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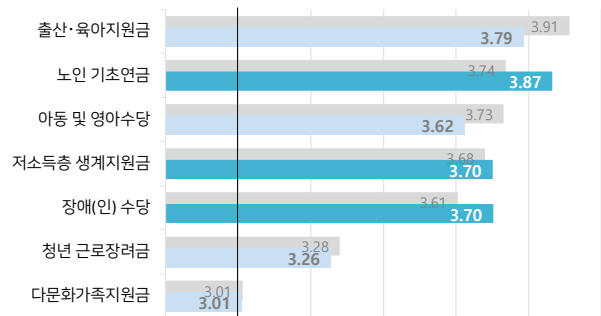
□ 40대 지원정책 필요성 높고, 5060세대 낮아

- 40대는 30대 여성과 비슷한 수준의 필요성 점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필요성 점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 색으로 표시함
 - 검은 세로선은 '보통'(3점) 기준선이며, '보통'(3점)보다 낮은 수치는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이에 비해 5060세대는 상대적으로 필요성 점수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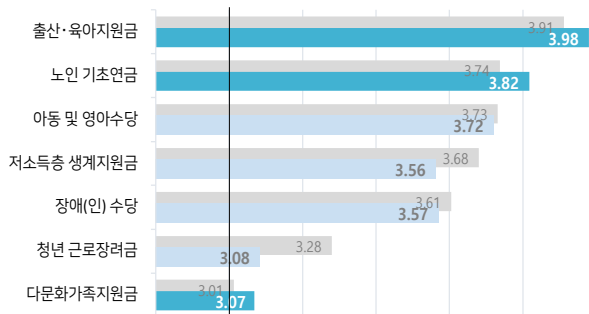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40대 (단위:점)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50대 (단위:점)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60대이상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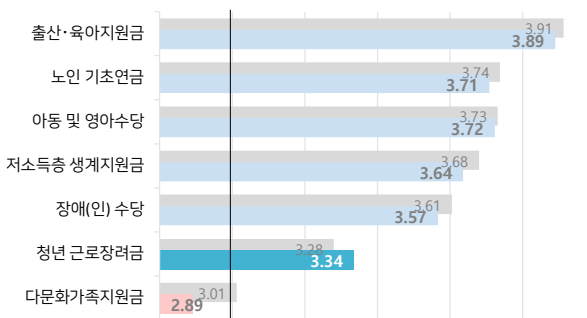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2030세대와 4060세대를 가르는 기준선은 '노인 기초연금'으로, 2030세대는 국민 전체보다 낮은 필요성 점수를 기록한 데 비해 4060세대는 국민 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 : 향후 '노인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2030세대와 4060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
- ☑ 또한 '청년 근로장려금'은 20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음
 - : 20대 남녀는 국민 전체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필요성 점수를 나타냄
 - : 하지만 30대 남녀를 비롯해 4060세대는 국민 전체보다 낮음
 - : 20대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다른 세대의 반발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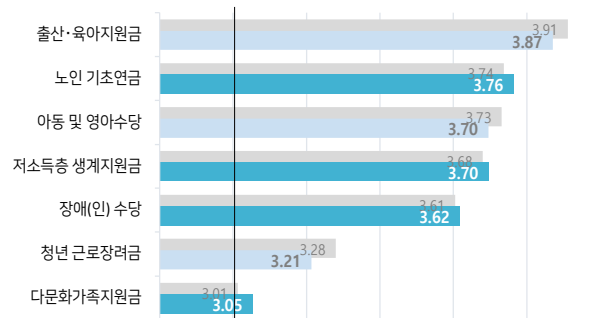
□ 개인이익 중시층, 지원정책 필요성 낮아

- 지원정책 필요성을 이익중시별로 살펴보면, 개인이익 중시층의 필요성은 국민 전체보다 낮고, 사회이익 중시층은 높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필요성 점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 색으로 표시함
 - 검은 세로선은 '보통'(3점) 기준선이며, '보통'(3점)보다 낮은 수치는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중간층은 두 계층 중간 수준의 지원정책 필요성 점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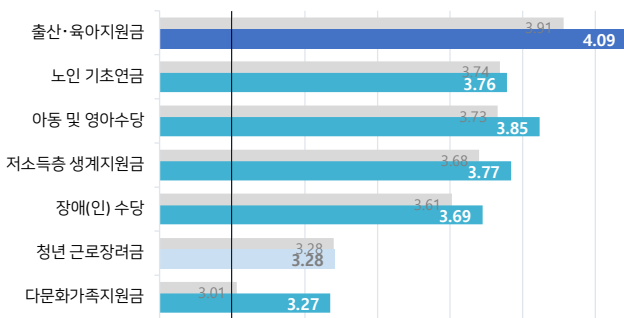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개인이익 중시층 (단위:점)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중간층 (단위:점)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사회이익 중시층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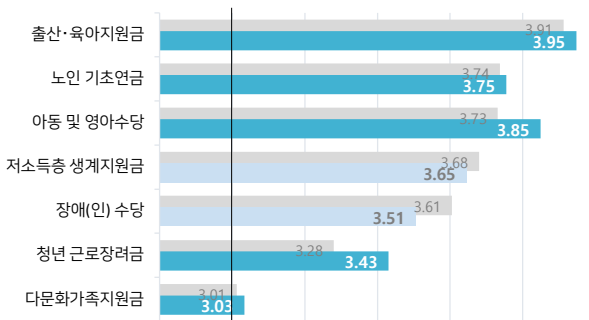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개인이익 중시층도 절대적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 '다문화가족 지원금'만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하는 2.89점을 기록했을 뿐, 다른 정책들은 모두 3점 이상임
 - : 즉,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에 대한 지원에 동의하고 있음
- ☑ 다만, 필요성 점수를 사회이익 중시층과 비교하면 두 계층 간의 차이가 뚜렷함
 - : 개인이익 중시층은 국민 전체보다 점수가 낮고 사회이익 중시층은 높아, 그 상대적 차이가 드러남
- ☑ 한편, 개인이익 중시층과 사회이익 중시층을 가르는 기준은 '청년 근로장려금'임
 - : 개인이익 중시층은 유일하게 국민 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사회이익 중시층은 유일하게 국민전체와 같은 점수를 기록함
 - : 이는 개인이익 중시층에 20대가 많고, 사회이익 중시층에 60대 이상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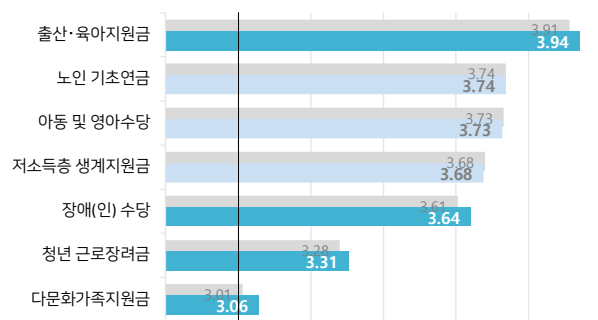
□ '삶 번창중' 필요성 높고, '고통스러움' 낮아

- 삶 평가지수별로 살펴보면, '번창중' 계층의 필요성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삶 평가지수'는 현재와 약 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평가토록 한 후, 이를 종합해 '번창중', '고군분투중', '고통스러움' 등 3가지로 유형화하는 방법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사회지표 보고서』 참고)
 - 2023년 5월 조사결과 '번창중'은 10%이고, '고군분투중' 64%, '고통스러움' 26%로 조사됨
- '번창중' 계층은 상당수 지원정책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필요성 점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 색으로 표시함
 - 검은 세로선은 '보통'(3점) 기준선이며, '보통'(3점)보다 낮은 수치는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고통스러움' 계층은 국민 전체보다 필요성 점수가 낮고, '고군분투중' 계층은 두 계층의 중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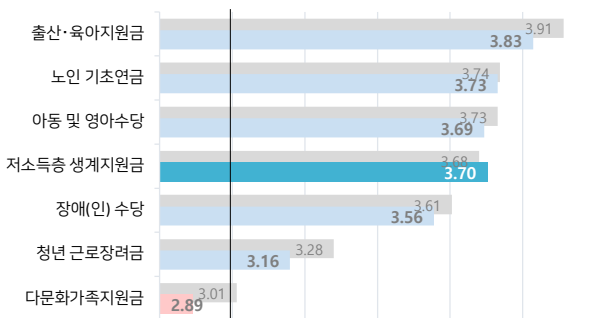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삶, 번창중 (단위:점)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고군분투중 (단위:점)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 고통스러움 (단위:점)



Kstat Point

- ☑ 자신의 경제상황에 따라 지원정책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임
 - : 경제 상황이 좋으면 지원정책에 긍정적이고, 나쁘면 부정적인 모습이 뚜렷함
 - : 삶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지원 태도가 달라짐
- ☑ 이렇게 볼 때 경기침체가 더 심화되거나 길어져 국민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지원정책 필요성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계층 간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큼
- ☑ 한편, 주관적 이념성향별 필요성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음
 - : 보수층과 중도층이 국민 전체보다 소폭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진보층은 소폭 높은 점수를 기록한 정도의 차이에 그침

▶ 사회 봉사·지원 활동에 대한 태도

□ 국민들, 국내 봉사·지원활동에 더 우호적

- 우리 사회의 다양한 봉사·지원단체 활동에 대해 그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함
 - “우리사회는 다양한 봉사·사회지원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각각의 봉사·사회지원 활동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전혀 필요없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필요하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임
- 필요성이 가장 높은 정책은 ‘국내 결식아동 지원’(4.05점)이고, 다음은 ‘국내 독거노인 지원’(3.86점), ‘국내 빈곤층 대상 무료급식 활동’(3.80점) 순으로 응답함
- 필요성이 가장 낮은 정책은 ‘해외 빈곤아동 지원’(3.00점)이고, 다음은 ‘국제 난민지원 활동’(3.02점), ‘국제 환경보호 활동’(3.30점) 순이었음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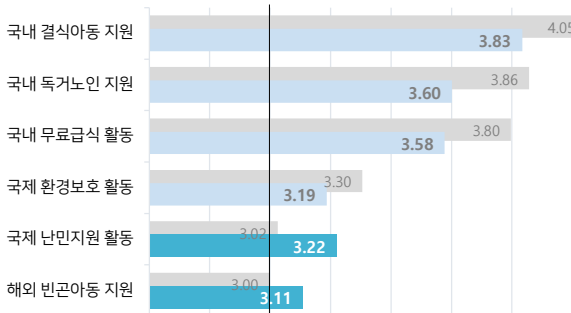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전체적으로 정부의 복지·지원 정책에 이어 사회 봉사·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함
 - :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이익 중시’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 ☑ 다만, 국내와 국외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국내 차원의 봉사·지원활동에 훨씬 긍정적임
 - : 국내의 결식아동 지원, 독거노인 지원, 무료급식 활동에 대한 필요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 각종 미디어를 통해 국외 봉사·지원활동에 대한 모금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는 약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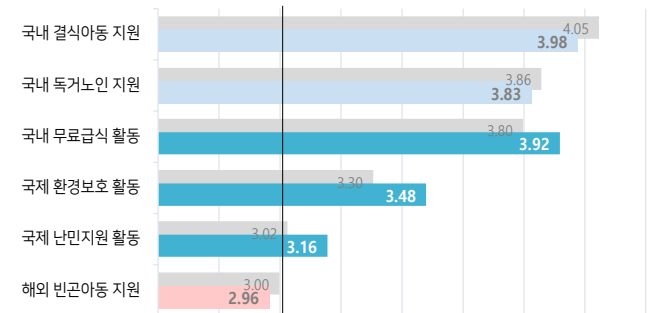
□ 성/연령별 : 2030세대, 여성이 필요성 점수 높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필요성 점수가 높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필요성 점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 색으로 표시함
 - 검은 세로선은 '보통'(3점) 기준선이며, '보통'(3점)보다 낮은 수치는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가장 필요성 점수가 높은 성/연령대는 여자 20대로, 대부분의 봉사·지원활동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냄
- 이에 비해 남자 30대는 모든 봉사·지원 활동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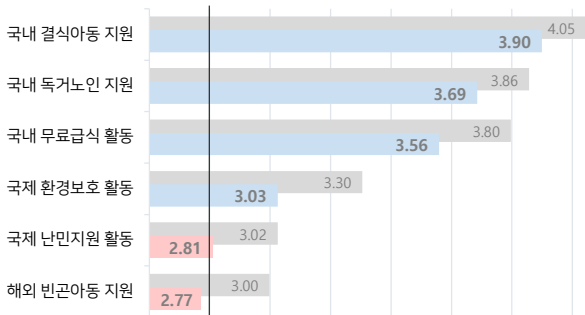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남 18~20대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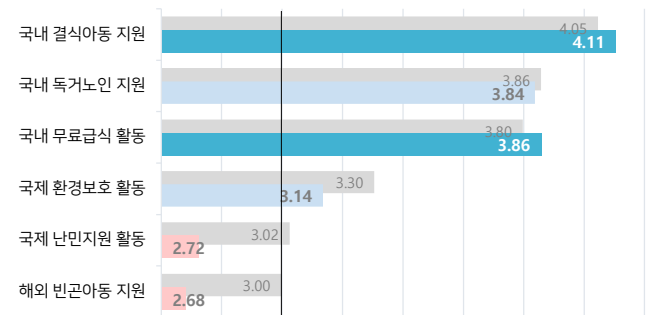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여 18~20대 (단위:점)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남 30대 (단위:점)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여 30대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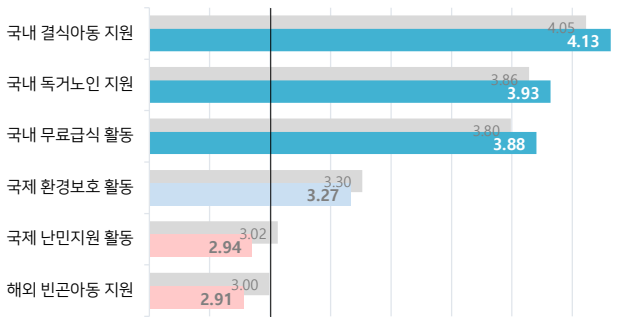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의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에서 유독 '국내 독거노인 지원' 필요성이 낮음
 - : 국민 전체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절대적인 면에서도 다른 봉사·지원활동 보다 낮음
 - : 앞서 정부 복지·지원 정책 중 '노인 기초연금' 필요성 점수가 국민 전체보다 낮은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결과임
- ☑ 한편, 남자 30대는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낮은 필요성을 기록했는데, 이는 모든 성/연령대 중 유일함
 - : 남자 30대는 앞서의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 이어, 사회 봉사·지원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모습임
 - : 이는 '개인이익 중시층' 비중이 매우 높은 남자 30대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 남자 30대는 '개인이익 중시층'이 68%로 가장 많고, '사회이익 중시층'은 8%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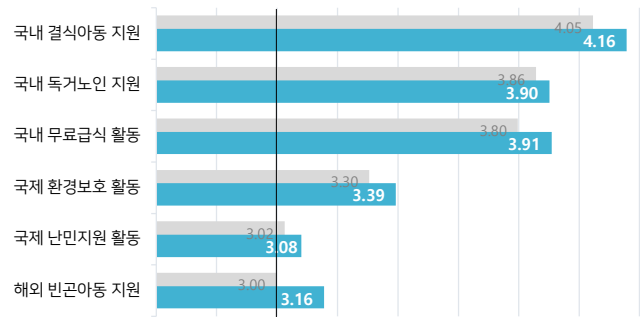
□ 50대,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가장 높아

- 40대는 30대 여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필요성 점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필요성 점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 색으로 표시함
 - 검은 세로선은 '보통'(3점) 기준선이며, '보통'(3점)보다 낮은 수치는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50대는 모든 봉사·지원활동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필요성 점수를 기록함
 - 모든 성/연령대에 걸쳐 50대의 필요성 점수가 가장 높음
- 60대이상은 국외 봉사·지원활동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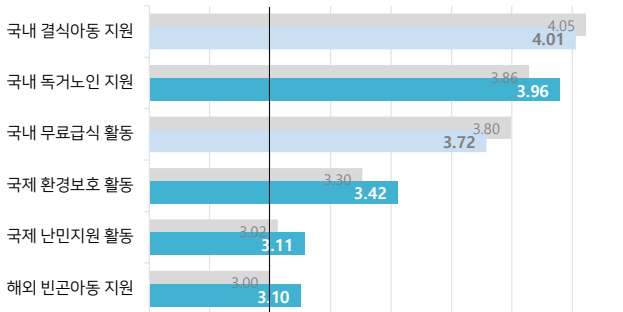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40대 (단위:점)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50대 (단위:점)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60대이상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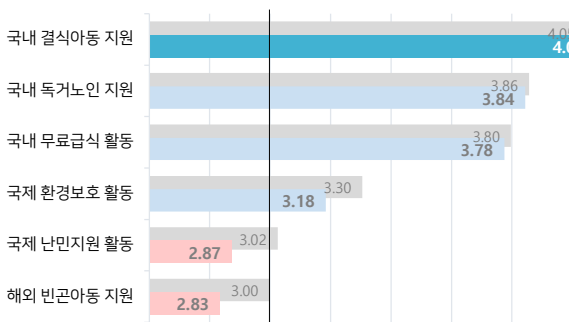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내 독거노인 지원'에 대해 2030세대는 국민 전체보다 낮은 필요성 점수를 기록한 데 반해, 4060세대는 높음
 - : 정부 복지·지원정책에서 '노인 기초연금'이 2030세대와 4060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듯이, 사회 봉사·지원활동에서는 '국내 독거노인 지원'이 기준이 되고 있음
- ☑ '노인'을 바라보는 2030세대와 4060세대 간의 인식 및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제도 개편(국민연금 개편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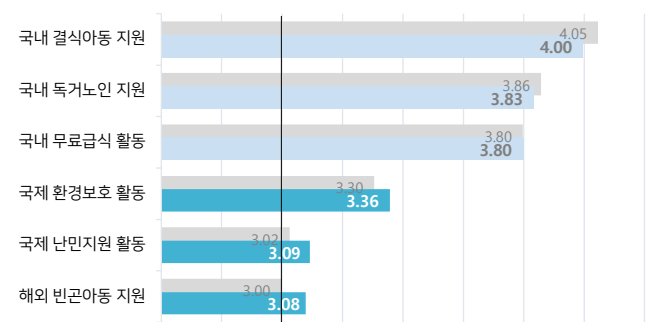
□ 개인이익 중시층,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낮아

-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을 이익중시별로 살펴보면, 개인이익 중시층의 필요성은 국민 전체보다 낮고, 사회이익 중시층은 높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필요성 점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 색으로 표시함
 - 검은 세로선은 '보통'(3점) 기준선이며, '보통'(3점)보다 낮은 수치는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중간층은 두 계층 중간 수준의 지원정책 필요성 점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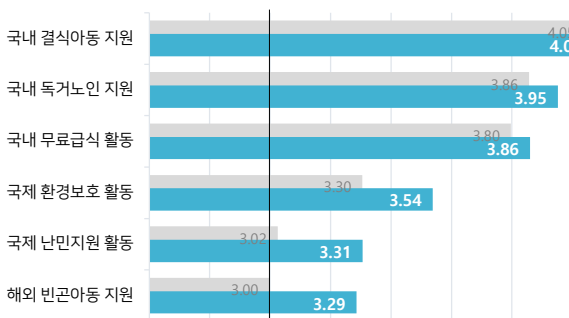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개인이익 중시층 (단위:점)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중간층 (단위:점)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사회이익 중시층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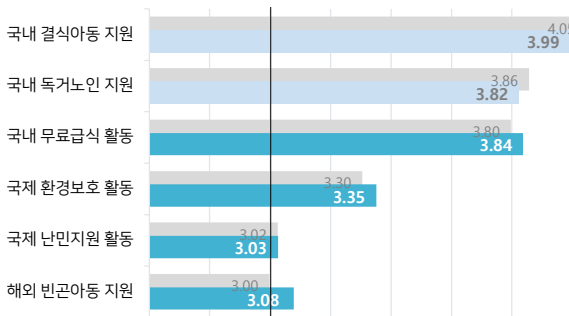
Kstat Point

- ☑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개인이익 중시층'과 '사회이익 중시층' 간의 차이가 있음
 - : 앞서의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에 이어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에서도 개인이익 중시층은 국민 전체보다 필요성 점수가 낮음
 - : 상대적으로 사회이익 중시층은 필요성 점수가 높음
- ☑ 국민들 스스로가 우려하듯이 '개인이익 중시' 흐름이 강화되는 것은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약화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됨
 - : '개인이익 중시' 흐름이 모든 계층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흐름이자 견고하다는 점을 볼 때, 국민의 우려가 현실화 될 개연성이 다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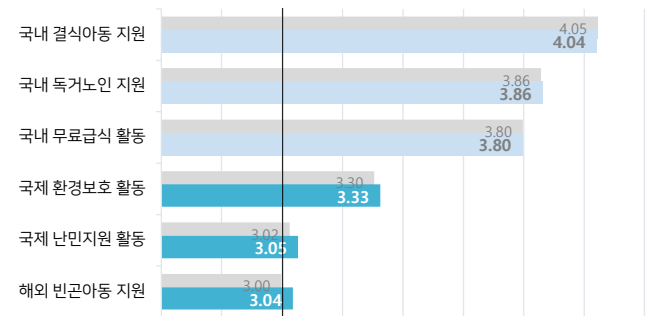
□ '삶 번창중' 계층, 상대적으로 필요성 높아

- 삶 평가지수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없이 국민전체와 비슷한 필요성 점수를 기록함
 - '삶 평가지수'는 현재와 약 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평가토록 한 후, 이를 종합해 '번창중', '고군분투중', '고통스러움' 등 3가지로 유형화하는 방법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사회지표 보고서』 참고)
 - 2023년 5월 조사결과 '번창중'은 10%이고, '고군분투중' 64%, '고통스러움' 26%로 조사됨
- '번창중' 계층이 상대적으로 국민 전체보다 소폭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고통스러움' 계층이 소폭 낮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필요성 점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 색으로 표시함
 - 검은 세로선은 '보통'(3점) 기준선이며, '보통'(3점)보다 낮은 수치는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고군분투중' 계층은 두 계층의 중간수준의 점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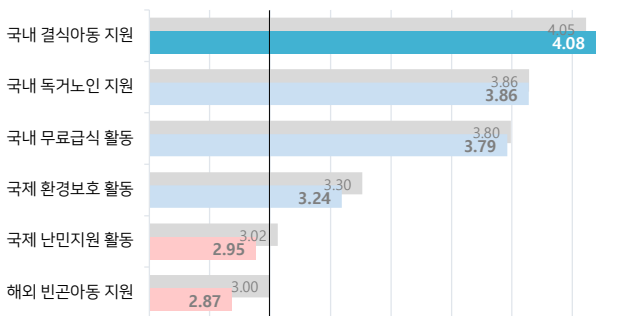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삶, 번창중 (단위:점)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고군분투중 (단위:점)



사회 봉사·지원활동 필요성 : 고통스러움 (단위:점)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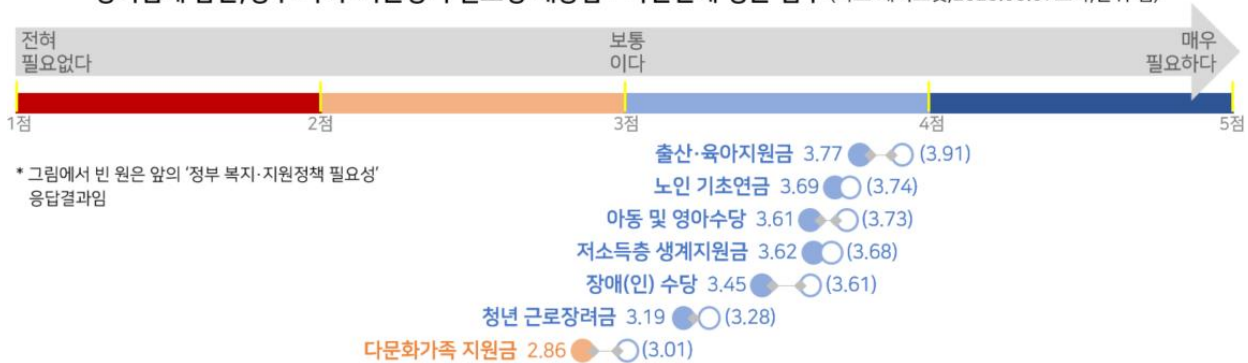
- ☑ 앞서 정부 복지·지원정책의 경우 '번창중' 계층의 필요성 점수가 높고, '고통스러움' 계층은 낮았으나, 사회 봉사·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삶 평가 계층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
 - : 이러한 차이는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한편, 주관적 이념성향별 필요성 점수 역시 거의 차이가 없었음
 - : 중도층이 국민 전체보다 소폭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보수층과 진보층은 소폭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경기침체에 따른 태도 변화

□ 국민들, 경기침체 상기사 정책 필요성 소폭 낮아져

- 경기침체 영향으로 정부 예산이 조정되거나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후,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을 재차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여전히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에 동의함
 -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차원의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선생님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다음 각각의 복지·지원 정책이 어느정도 필요한지 다시 응답해 주세요.”라는 질문 후 ‘전혀 필요없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필요하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임
- 전반적으로 앞서의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점수보다 낮아졌지만 ‘다문화가족 지원금’을 제외하면 모두 ‘보통’(3점) 이상을 기록함
 - 필요성 정책 순위 역시 앞서의 정부 복지·지원정책과 같음

경기침체 감안, 정부 복지·지원정책 필요성 재응답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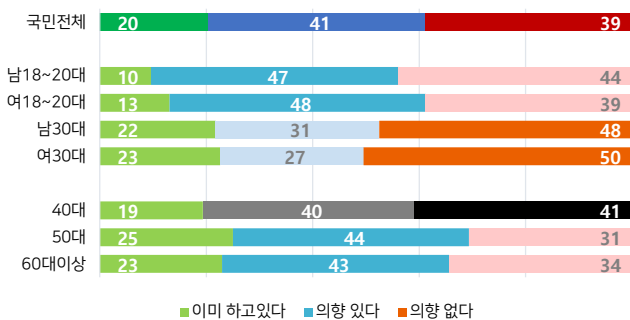
Kstat Point

- ☑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정부의 재정수입이 줄어들면서 계획했던 각종 정부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 : 정부는 올해 세금 수입으로 400조5,000억 원을 예상했으나, 1분기가 지난 현재 이미 예상보다 30조 원에 가까운 차질이 발생함
 - : 당초 올해 경제전망을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는 나쁘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계획을 짰지만, 하반기에도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세수 결손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자체를 실행하지 않는 ‘예산 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 이러한 상황을 국민에게 상기시켰으나, 국민들은 필요성 점수를 소폭 낮췄을 뿐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함
 - : 필요성 점수 순위도 그대로이듯, 정부의 복지·지원정책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음
 - : 이러한 국민여론을 볼 때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예산 불용’, 즉 사업을 실행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각종 복지·지원정책 규모를 줄일 경우 국민적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 계층별 재응답 결과 역시 애초의 응답에서 필요성 점수만 줄었을 뿐 기본 흐름은 유사함
 - : 성/연령별, 이익중시별, 삶 평가별, 이념별 모두 동일함

□ 경기침체 감안 사회단체 기부 의향, 유무 팽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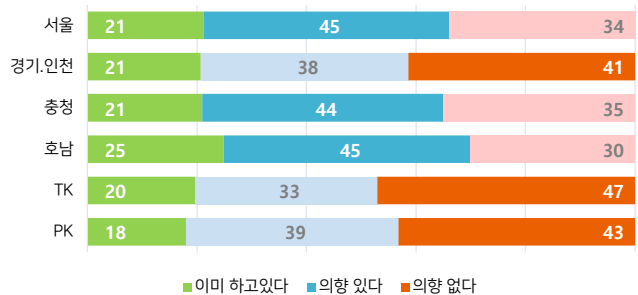
- 국민들은 경기침체 상황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팽팽함
- '의향이 있다' 41% vs '의향이 없다' 39%로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이미 기부를 하고 있다'는 응답도 20%로 조사됨
 - "앞서의 다양한 봉사·사회지원 단체는 활동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께서는 한 곳이라도 기부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라는 질문의 응답 결과임
- '의향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녀 20대 △5060세대 △서울, 충청, 호남 △자영업, 블루칼라, 학생 △사회이익 중시층 △삶, 고군분투중 계층 △보수층, 진보층 등임
- 이에 비해 '의향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녀 30대 △경기.인천, TK, PK △주부, 은퇴.무직자 △삶, 고통스러움 계층 △중도층 등임
- 두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40대 △화이트칼라 △개인이익 중시층, 중간층 △삶, 번창중 계층 등임

경기침체 감안,사회단체 기부 의향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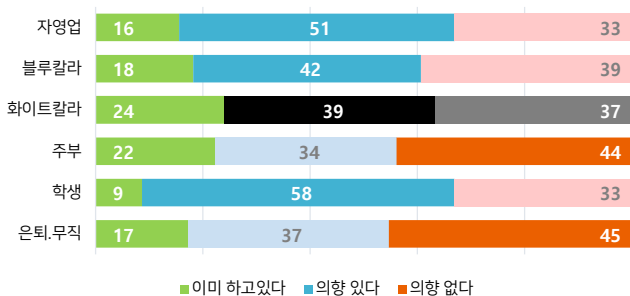
경기침체 감안, 사회단체 기부 의향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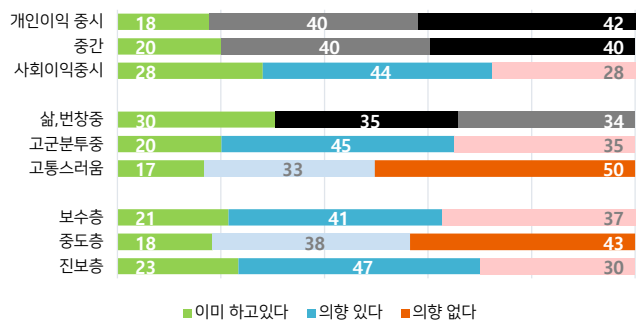


경기침체 감안, 사회단체 기부 의향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5.07조사,단위:%)



사회단체 기부 의향:이익중시별,삶평가별,이념별 (단위:%)



Kstat Point

- ☑ '의향 없다'는 응답자만 이유를 물어본 결과 '내 개인 경제상황 때문' 75%, '기부 필요성 못 느껴서' 18%로 나타남
- ☑ 국민들은 사회단체의 봉사·지원활동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데 이어, 기부할 의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의향이 실제 기부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긍정적인 모습임
 - : 또한 자신의 경제상황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76,77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76호와 77호는
각각 6월 15일(목요일), 29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6월 사회지표는 6월 22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